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0.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 ○○○○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이 사건 운전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3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6. 20. 청구인에게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5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운전기사에게 보수교육 의무를 수차례 고지하고 이 운전기사로부터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운전기사가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은 그 책임을 다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2015년도 보수교육을 모든 운수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총 50회를 실시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위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운수종사자가 2015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추가 교육 일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운수종사자를 2016. 5. 31.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 ○○○○’라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6. 5. 27.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여객자동차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통보받았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6. 5. 30.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30만 원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6. 20. 청구인에게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5만 원을 부과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의하면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기사가 2015년도 보수교육 종료 시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다면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운전기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6년 5월경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던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과징금 15만 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